

김기춘 '모르쇠' ... "최순실, 진짜 몰라"

'최순실 국정특위' 에서 각종 관련 의혹 조목조목 반박... 의원들의 호통에는 사과 하며 확전 피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 국정특위' 소속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최순실을 알지도 못한다고 항변하면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의 호통에는 몸을 극도로 낮추면서 사과를 하며 확전을 피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 머리 손질 사실 알지 못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2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는 인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고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의료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질문에도 "청와대 관련 일은 알지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대면하고를 했어야 한다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생각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여성 대통령이라 묻지 못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았으나 안 맞았나 왜 안 물어봤냐고 해서 나는 그런 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최순실 정말 몰랐나 추궁에 "차은택이 착각한 것"

김 전 실장은 비선 최순실 존재를 정말 몰랐느냐는 박근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은) 전혀 모른다. (당시에) 차은택 씨를 한 10분간 (만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 감독이) 뭔가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가 차은택 감독에게 직접 연락해 (공관으로) 오라고 했었다"며 "(박) 대통령이 차은택을 한번 만나보고 문화 융성에 대한 의지를 알아서 보고하라"고 했다"고 차은택 감독과의 회동에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과의 관계를 거듭 추궁하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최순실을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하지 않았겠냐"며 "검찰 조사하면 알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대회 성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가 자라라고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앞서 '문체부 김들이기' 일환으로 인사 개입을 했고, 문체부 김들이기의 시발점은 정유라 연루된 대한수미협회 감사보고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재임하던 동안 정지작업을 하거나 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세월호 인양 반대? 내 아들도 죽어었는데 왜 인양하지 말라 했냐?"

한편 이날 여야 청문위원들은 소위 '김영한 비망록'에 기록 돼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시신 인양은 안 된다'고 자신이 발언했다는 기록이 담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며 "회의를 하다 보면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도 자식이 죽었는데 왜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하겠냐"고도 항변했다.

그는 특히 "그 당시 인양 문제를 두고 해수부 장관과 긴밀히 의논한 적이 많다"며 "저도 자식이 죽었는데, 왜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고 하겠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최순실 말씀이지만 김

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성 많이 하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죄송합니다"라고 몸을 낮추며 화전을 피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세월호 시신 인양에 반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개입 의혹과 줄기세포 시술 의혹 등도 모두 부인

김 전 실장은 한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소해서 현재 결정된 사안"이라며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완전한 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 불법 줄기세포시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가 몸이 약해서 일본에서 면역치료를 (받았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조인한 바 없다"며 "우리 당 상임교원과 전직 국회의장들이 처음에 한 번 불러가 '각자 하고 싶은 얘길 하라' (고 해서) 다녀온 이후엔 전혀 이전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뉴스

김관영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호남유권자연합)



김관영 의원

김관영 국회의원이 호남유권자연합이 선정하는 '2016년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정치개혁과 도덕성회복을 모토로 활발한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호남유권자연합은 매년 지역발전과 건강한 정치풍토 확충에 기여한 국회의원.시도의원.지자체장들을 뽑아 시상식을 갖고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의 제1당으로 거듭난 국민의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호남.전북정치는 물론 민주주의 회복을 선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더욱 힘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했다"며 "탄핵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정안정을 찾고, 민주세력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국민의당 신임 사무총장에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신임 사무총장에 김광수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7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유성업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김광수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전주시 의원과 도의원.도의장 등 기초.광역의회를 두루 거쳤다.

김 의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이틀 남은 엄중한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면서 "탄핵안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최순실, 박 대통령 옷 · 가방값 4500만원치 대납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옷값 3,000만원과 가방값 1,500만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때 '최순실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 박 대통령의 옷 · 가방값 4,500만원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에게 돈을 받았다"고 답했다.

고 전 의원은 "(최순실이) 운전수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는" 영상에서 봤던 본인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다"며 "영수증을 주면 그 돈에 맞게 계산했다. 개인 돈으로 봤다"고 말했다. /뉴스

장시호 "문체부에서 6억 · 삼성에서 16억 받아"

'비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는 7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 원, 삼성으로부터 16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원영 새누리당 의원의 "영재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얼마의 자금을 지원받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문체부에서 받은 돈이 6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이어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질문에도 "네"라고 시인했다. 자금을 "아이들 인재육성에 썼다"고 답했다. /뉴스

차은택 "최순실이 '장관 · 수석 추천해 달라' 요청"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7일 최순실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임명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이 먼저 요청해서 제가 장관님과 수석님 몇 분을 추천드렸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차 전 단장은 "장관 추천 요청은 (최순실과) 만난 지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바로 얘기가 나왔다"며 "직접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탈락하자 바로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수석 추천은 같은 해 말 10월경이었던 것 같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추천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은 김 의원이 '최순실이 장관 · 수석감을 본인이 알아보고 다닌 것이냐'고 묻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실제로 최순실씨가 여러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 문화 쪽은 체계 얘기해서 제가 추천했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주관한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 "제가 먼저 부탁한 적 없고 최순실씨가 대통령께서 가실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총) 세 차례 왔다"고 말했다. /뉴스

예결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용모 위원은 보훈공원 추념탑에 관계자들의 성명을 나열하는 것은 낯내기 지양하고, 덕진공원에 건립하는 것은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영구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원인 파악과 도 교육청과의 공조체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목적과 추진근거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학수 위원은 보훈공원 조성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내용과 국비 지원 약속은 있지만 국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 행사성 경비 사전절차 여부와 명확한 지원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장학수 부위원장은 노숙인 시설을 전주, 군산, 익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존 시설에 정원이 다 채워졌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시설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타 시군 노숙자 수요조사와 시설지원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현철 위원은 광역자활센터 감사결과 법률 위반이 18건이나 되는데 이 단체에 패널티도 없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출연기관으로 단체 지원에 대한 업무 연찬도 잘 안 돼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재용 기자



오늘 뒤에 결기 야3당 대표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 결의대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김관영 의원, '우병우 소환법' 대표발의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시 '공시송달로... 증인 · 감정법 개정 추진'

국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출석에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 입법의 국회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7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국회에서 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50 제5항에 증인의 경우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계시관, 관보 또는 신문,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 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또한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있어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문성준 기자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의무도 없어져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시행하는 국정감사나 조사 등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 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준 기자

도의회,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2017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6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도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은 2조 8,314억 원(전년 대비 1,252억 원 증가, 4.63% ↑),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조 9,028억 원(기정예산 대비 1,189억 원 증가, 4.25% ↑)의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및 균형성, 신규사업의 효과성,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교육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도민 목소리를 담아 도민 입장에서 예산을 심사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